

12.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2020년 12월 16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

☐ 제안이유

- 지역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 지원제도 및 유치 지원체계를 정비·개선하고 지원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기업유치위원회 등 투자유치 지원체계 정비(안 제3조~제6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안 제11조)

-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16조)
- 직원 거주지원(안 제17조)
-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1조~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충호)

□ 적법성 여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명 변경은 기업으로 한정된 유치범위를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안 제6조(회의)까지는 기업유치위원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서면회의 운영을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복귀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50~100% 범위 내)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4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투자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안 제1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및 안 제17조(직원 거주지원)는 국내 복귀기업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직원 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원책을 반영하려는 것임.
- 안 제21조(사후관리)는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비치 및 투자이행 점검을 명문화한 것임.
- 안 제22조(보조기업의 의무)는 보조금 채권 담보 제출의무,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임.

□ 검토결과

- 미중 갈등 격화 및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과 국내복귀기업 등의 유치는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상황임.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및 확대,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원책 신설 등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정부는 올해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음. 이에 대구시도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우리 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여유면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노후 산단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주요 항만을 보유한 부산, 울산, 인천 등에 비해 물류 여건도 불리한 상황임.
- 이에 산업단지 현대화, 물류 이용의 편의성 향상, 스마트공장 확산 등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임. 또한 대규모 기업 유치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중소·중견기업 유치지원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참고**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 **(유턴기업 선정 현황)**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2개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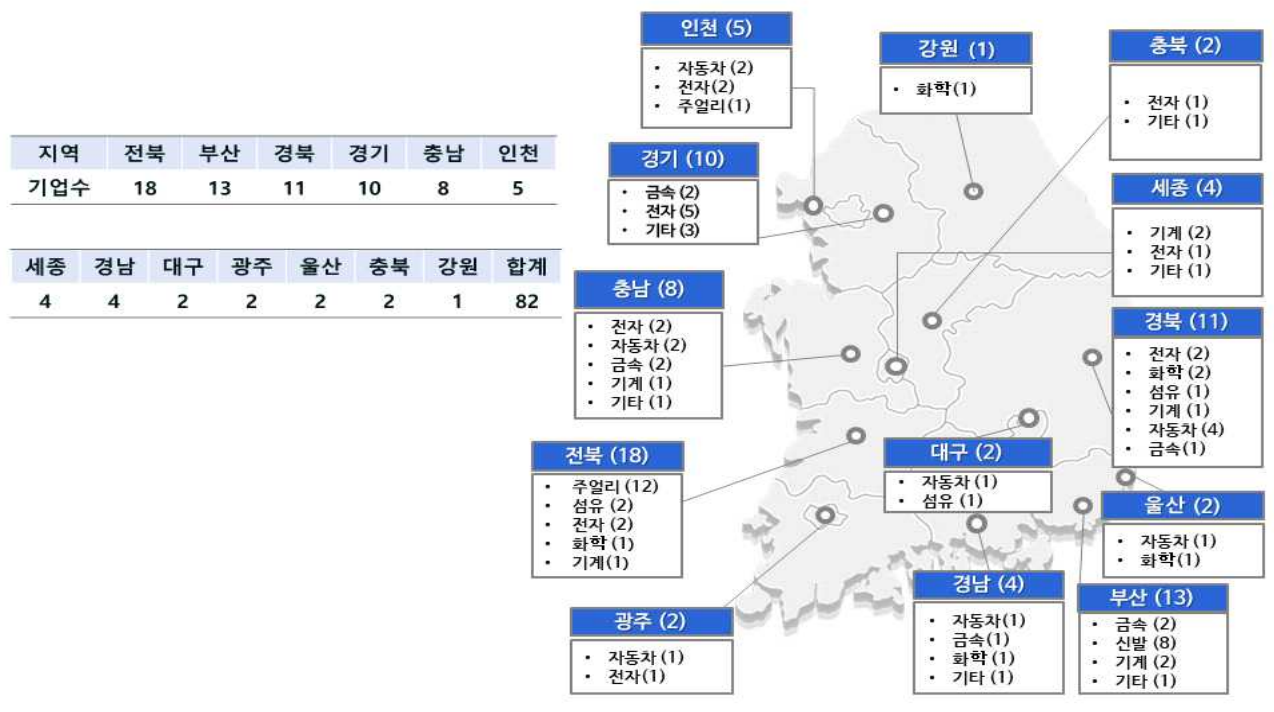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9)18
- 진출국가 : 미국 1, 중국 70, 베트남 7, 필리핀 2, 방글라데시 1, 인도네시아 1
- 기업규모별 : 대기업 1, 중견기업 11(공시대상집단 2개사 포함), 중소기업 70
- 업종별

업종	전자	주얼리	자동차	금속	신발	기계	화학	섬유	기타	계
기업수	16	13	12	8	8	7	6	4	8	82

*기타 : 콘택트렌즈, 주방용품, 포장용기 등

○ 국내복귀지역

지역	전북	부산	경북	경기	충남	인천	세종	경남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강원	계
기업수	18	13	11	10	8	5	4	4	2	2	2	2	1	82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